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7년 9월

“경작자가 쌀소득직불금 받도록”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개선 공청회, 9월 10일 개최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9월 10일 마사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연구원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9월 10일 마사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제도개선 필요성 공감대 형성 및 법령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열렸다.

직불제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농림부 권은오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이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개선 방안’이란 제목으로 직불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권 단장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이 가운데 85%를 정부가 매워 주는 쌀직불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쌀직불제 제도개선 T/F 및 점검단을 만들어 시행 가능한 사안에 대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주요 사안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쌀 시장 개방 피해와 무관한 신규진입자의 직불금 수령을 막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1년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과 농지에 한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일부 실경작하지 않는 사실상의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 이외 업종에서 연간 3천 5백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직불금 혜택이 기업농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직불

제 신청자가 개인 농업인일 경우 8ha까지,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 등 법인일 경우 50ha까지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상한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실 경작자 중심으로 직불제 개선

직불제 개선방안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강화된다. 그리고 이유에 관계없이 직불금 부당신청이 적발되면 그 사람이 소유한 모든 농지에 대해 직불제 등록을 제한한다. 권 단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개선안에 보강하여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우리 연구원 최정섭 원장의 사회로 열려 연구원 박동규 선임연구위원과 서강대학교 사공용 교수, 서울대학교 이태호 교수, 경기도 연천 전광엽 농업계장, 기획예산처 조규홍 농림해양재정과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탁명구 사무총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최재관 정책위원장, 고려대학교 한두봉 교수, 전라남도 영광식 친환경농업과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홍준근 사무총장이 지정 토론을 했다.

‘농업전망 2008’ 2008년 1월 23일 개최 예정

‘농업전망 2008’을 내년 1월 23일(수)에 개최할 예정이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농산물 주요품목의 수급 전망, 예상되는 주요 농정이슈 등이 발표된다.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더욱 내실있는 ‘농업전망 2008’ 행사준비와 주제선정을 위해 올해 전망대회 참가자들과 농업관측정보센터 모니터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10년 농업과 연구원 발전 방안 토론회 연구부서장 혁신연찬회 개최



연구원은 농업과 연구원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부서장 혁신연찬회를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했다.

연구원은 8월 31일과 9월 1일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청태산자연휴양림에서 연구부서장 혁신연찬회를 개최, 농업과 연구원 발전을 위해 토론했다.

최정섭 원장을 포함해 12명이 참석한 연찬회에서 김병률 동향분석실장이 농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필요성을 골자로 발제했다. 박준기 연구조정평가팀장은 연구관리와 성과확산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늦은 밤까지 진행된 토론에서 연구부서장들은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농산물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문제 연구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농업의 이슈를 선점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연찬회를 주재한 최정섭 원장은 “연구원이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부서장부터 기존의 사고를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하고, 우수한 연구자를 확보하여 역량을 개발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혁신수준 4단계에 진입한 연구원은 올해 들어 지원부서 보직자 혁신워크숍을 시작으로, 연구책임자급 혁신워크숍, 연구부서장 혁신연찬회까지 혁신 선도를 위한 대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농업·농촌 최신뉴스 제공

연구원은 9월 1일부터 중앙일간지와 경제일간지, 농업전문지, 인터넷신문, 지

방일간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농업·농촌 및 연구원 관련 최신 뉴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요구도가 높았던 최신 농업·농촌 관련 뉴스를 비플라이소프트사와 계약, 9월 1일부터 제공하게 되었다. 연구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최신 농업뉴스’라는 난을 만들어 4시간 단위로 주요 농업·농촌 및 연구원 관련 뉴스를 제공, 필요한 뉴스를 클릭하여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은 물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식정보시스템 개편 착수

연구원은 9월 4일 크리스피드라는 경영정보시스템 전문 업체와 지식정보시스템(AGRE) 개편 관련 계약을 맺고, 9월 14일 중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지식정보시스템을 더욱 편리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AGRE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8년 5월 2일에 마칠 계획이다.

농촌연구자문단 회의 개최

우리 연구원은 농업인단체장들을 초청, 2008년에 추진할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자문회의를 9월 19일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최정섭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에 꼭 필요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지현 기획조정실장은 연구원의 일련현황을 설명하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와 내년에 계획 중인 연구과제를 소개했다. 또한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도하개발어젠더(DDA) 농업협상 동향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농업인단체장들은 농촌후계인력 육성, 농촌복지와 여성 결혼이민자 정착 연구, 지속가능 농업 연구, 미래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 등을 제안하며 농촌현장을 바탕으로 연구하길 당부했다.

중국 산둥사회과학원 연구자 일행 내원



중국 산둥사회과학원 연구자 10명이 연구원을 방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방문, 최정섭 원장과 환담을 나누는 뒤 중회의실에서 관련 연구자들을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농업과 연계성이 큰 지역에 위치한 산둥사회과학원과 우리 연구원은 농업관측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공동연구과제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향후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

류 등 농업·농촌분야의 이해 증진 방안

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우산업

정민국 연구위원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해부터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에 한해 다시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뱀조각 검출, 갈비통뼈 발견, 심지어 광우병 관련 특정위험부위(SRM)인 척추 뼈까지 발견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불신이 매우 높아졌다. 소비자단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조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통제 가능국으로 판정 받은 이후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수입위협평가' 절차를 통해 갈비를 포함한 수입 범위 확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제고 노력 필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있어서도 한·미 간 이견이 팽팽하다. 미국은 국제수역 사무국의 권고사항을 내세워 갈비는 물론 광우병 특정위험부위로 알려진 척추 뼈까지 수입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특정위험부위에 대한 수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리정부의 협상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인 2003년 국내 쇠고기 수입량 중 미국산의 비중은 68%였다.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경쟁국들보다 수입 가격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의 점유율이 높았던 이유는 국내 소비자에게 품질이나 안전성을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국내 수입시장에서 과거의 영광을 다

시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차례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미국이 국내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출 쇠고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쇠고기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 이해그룹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절차에 있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소비자 단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는 가운데 갈비 등 수입 범위 확대가 소비자 안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생산자 단체는 수입물량 증가로 국내 축산업이 입게 될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우농가의 사육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암소 및 거세우 도축물량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한우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육농가의 송아지 입식수요 감소로 송아지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우농가의 조기 홍수출하로 한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국면에 있지만 1등급 한우고기 가격은 하락 폭이 작으며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의 가격 차이도 확대되고 있다. 한우농가의 맘과 정성이 깃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

에 있어 가격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지만 식품의 경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가격을 비롯한 나머지 요소는 의미가 없다.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쇠고기를 지속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한우농가, 자신감 회복 필요

한우농가의 자신감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우고기 시장은 수입쇠고기 시장과 이미 상당부분 차별화되어 있다. 한우고기의 절반 정도가 1등급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1등급 고급육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한우고기라 하더라도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조기 출하된 고기는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한우농가는 조기 홍수 출하를 자제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급육 생산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 노력도 필요하다. 비육우 생산비 중 송아지 입식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료비이며, 송아지 생산비에서는 사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의 에탄올용 옥수수 수요 증가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료자급률 제고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산지에서 생산된 우수한 한우고기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한우산업이 당면한 주요 과제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비롯하여 사료곡물가격 상승 등 한우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한우고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기반을 확대해 나가면 한우산업의 전망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농정방향과 일치해야

박 동 규 선임연구위원

2005년도에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한 바 크며 농가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직불금 부당 신청 등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었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개선방안이 제도 도입취지에 벗어나거나 현실과 동떨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농정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면 제도 개선이 반복될 수 있다. 이는 자칫 농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소득안정 제도 도입목적이 달성되도록

지난 2년간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제기된 불합리성의 핵심은 형평성 위배, 도덕적 해이, 구조조정 지연 등이다. 경영규모가 큰 경영체가 직불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농외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도 납세자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임차농지를 경작하는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임차농지 소유자가 농지법상 규제를 피하고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직불금을 신청하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쌀산업이 개방 확대 등의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신규 농업인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대상 면적이 늘어나고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

쌀가격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의 목적이다. 직불금이 경영규모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모든 경영체의 소득은 기준 연도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경영규모까지만 직불금을 지급하면, 경영규모

가 큰 농가일수록 경영 위험은 높아지게 된다. 경영규모 5ha 이상인 농가의 소득 중 53.2%는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차입금 상환은 자산을 형성해가는 과정이지만 쌀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면 상환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급상환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와 함께 자산이 많은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감정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제도 변화로 농가에 충격을 주거나 정책 불신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평성은 근로의욕 저하시킬 수 있어

경영체 구성은 품목별 전문 농업인에서부터 복합영농인, 취미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각 경영체는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노동력의 일부를 농외활동에 투입하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도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해왔고 일부 농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외소득이 있는 쌀농가를 직불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역차별이고 정부의 암묵적인 제약 파기이며 농업인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물론, 농외소득이 많은 농업인이나 취미농을 농정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농외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를 농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전에 소득정책 추진 방향, 농업인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야 한다. 하지만 임대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실경작자를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동일 시·군인 경우에만 실경작으로 인정한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발생할 것이다. 경작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인데, 누가 어떻게 발급하고 발급된 자료를 증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경작자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2006년도 임대차 농지면적 비율은 4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농지 매입보다는 임차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임대차를 허용하도록 농지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임대차를 허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지 임대차 관계가 노출되도록 해야

직불금 신청면적이 2005년 100만 7천 ha에서 2007년에는 102만 6천 ha로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였으나 최근에 신청을 하였거나 대상 농지로 편입된 농지가 늘어난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규 농업인이 늘어나 직불금 신청면적이 늘어나고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는 문제의 진단과 처방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쌀산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노동력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진취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보다 젊고 유능한 노동력이 농업부문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신규 농업인 진입에 장벽을 설치하는 것은 농정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는 DDA 농업협상

임 송 수 연구위원

9월 들어 WTO 본부가 있는 제네바는 각국에서 모여든 협상 대표들로 북받았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지난 7월에 배포된 농업협상 회의 팔코니 의장의 모델리티(관세와 보조 감축의 지침) 초안을 논의하려 모였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는 이번 회의가 큰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 비관적 선입견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 6월 말에 G-4(미국, EU, 인도, 브라질) 각료회의가 결렬되었고 모델리티 초안 또한 자세한 내용이 빠져 합의 가능 영역을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집중적인 1단계 협상 시작

8월 31일에 G-33 그룹 대사들은 특별 품목(SP)과 특별세이프가드(SSM)에 관한 워크숍을 가졌다. 필자를 비롯하여 인도의 사마 교수, 개도국 연구센터(South Center)의 전문가들이 SP와 SSM를 주제로 발표한 뒤 쟁점 사항에 관하여 하루 종일 토론하였다.

9월 3일에 열린 151개국 비공식 회의는 의장의 협상 진행계획을 듣는 선에서 싱겁게 끝났다. 그러나 이내 의장 주도로 30여개 국 소규모 회의(Room E)가 소집되어 쟁점별로 활발하게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초안의 첫 문단(paragraph)별로 논의하는 방식이다.

회기적 진전이라고 할 만한 주요국의 입장 변화는 없었으나 구체적 쟁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작업이나 검증 절차를 밝기 시작하였다. 기술적인 사항은 작업반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협상이 진행된 3주 동안 거의 매일 그룹별 회의가 열려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는데, 우리나라는 G-10과 G-33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G-33 그룹에서 한국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욱 커지고 중요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민감 품목에 관한 관세할당물량(TRQ) 증량은 수출국의 제안대로 국내 소비량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등 G-10 수입국이 주장했던 수입량 기준보다 더 많이 쿼터 수입량을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감자, 보리 등의 쿼터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비량 기준으로 쿼터 증량

민감 품목의 수는 선진국 기준으로 세 번의 4%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품목이 아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기준으로 민감 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EU와 다른 수입국들은 HS 기준 지정을 선호하는 반면에 케언스 그룹 등 수출국은 이에 반대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HS 10단위 기준으로 '고추류' 품목은 모두 5개인데, 이 중 4개 품목의 관세율이 270%이고 나머지 하나가 27%이다. 한국이 4개만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입 쿼터를 계산할 때 전체 고추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대산출이 될 것이다. 소비량 자료는 HS가 아니라 품목별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대안을 찾으려고 작업반이 만들어져 HS 기준으로 소비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특별 품목에 관한 G-33 그룹의 견해는 일관하다. 개도국이 스스로 정하는 최소한의 품목은 무관세·무쿼터로 대우하고 지표(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개발) 기준으로 선정하는 나머지 품목에는 10% 이하의 관세 감축률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혼합방식은 수출국으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았다. 곧 SP에도 관세감축 및 쿼터 증량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G-33이 제안한 12개의


지표(예: 식량자급률, 고용 비중 등)가 과다하고 중복된다고도 지적하였다. 객관적인 국내외 통계자료 사용과 관련하여 수출국들은 SP 품목 선정이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개도국들은 자료 부재와 행정능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내세웠다.

SSM에 관한 논쟁도 뜨거웠다. SSM은 수입으로 인해 국내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입이 늘면 관세율을 높이도록 하는 개도국 전용 무역구제 조치이다. 가격과 물량에 근거한 발동 기준 연도 및 대상(국내 생산 농산물 및 대체재 또는 모든 농산물) 설정, 무역구제 정도(UR 양허수준 기준), 특혜무역의 포함 여부 등 많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공방이 있었다.

사실 G-33 그룹 안의 SP와 SSM 논의도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만들어 협상에 대응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10월 말에 나오는 모델리티 개정안

예상과 달리 집중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DDA 타결에 관한 비관적 견해에서 낙관적 기대로 바뀌어야 할지 아직 혼란스럽다. 의장은 10월 초부터 다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10월 말에는 모델리티 개정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진척이 빠르면 WTO 각료회의를 거쳐 2008년 초에는 모델리티 타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필자가 보기에 협상 특히 다자간의 논의의 넓이 뛰기가 아니라 경보이다. 쟁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최종 결승점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이다. 최종 타결 시점과 관계없이 10월 협상에 바짝 긴장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가속과 농업부문 대응

김태곤 연구위원

여름이 뜨거워지고 겨울이 점점 따뜻해진다.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침수지역이 넓어진다. 빙하가 용해하여 해면이 상승하고 해수온도가 높아진다. 생물다양성이 파괴된다. 농업생산이 감소한다. 모두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의 결과이다. 이것이 인간의 생존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유엔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경고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다. 매년 증가하여 지난 50년간 온난화 경향은 과거 100년간의 2배에 달하며, 21세기 말에는 지구온도가 섭씨 6도나 상승할 것으로 IPCC는 전망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중국이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러시아·일본을 포함한 4대국이 세계의 51% 배출한다. 우리나라도 10대 배출국에 속한다. <그림 참조>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 가속

온실가스는 인간 활동에 의해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가 소비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한다. 이것이 층을 이루어 지구전체를 덮어서 지구가 우주공간으로 방출하는 열을 흡수, 지구로 반사한다. 그래서 온난화는 가속된다. 지구온난화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1년 IPCC 3차 보고서이다. 과거에도 기온상승은 관측되었지만 인간 활동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이후 온난화의 영향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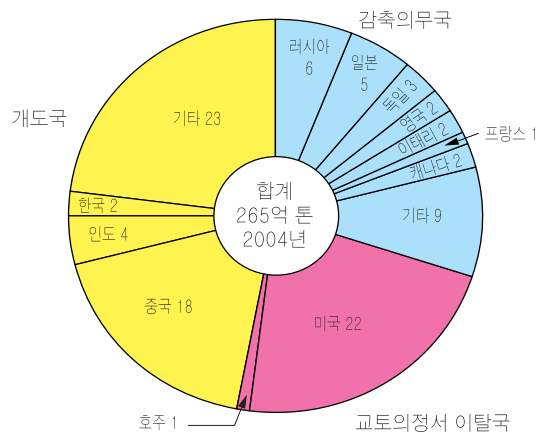
지구온난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지구개발센터(CGD)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간행한 보고서이다. 온실가스 증가속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IPCC의 '현상유지'를 전제로 2080년까지 농업생산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도 늘어나 식물생장이 촉진한다는 '시비효과'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 두 가지 시나리오로 추정하였다.

시비효과가 없는 경우 2080년 농업생산은 개도국 21%, 선진국 6%, 평균 16% 감소한다. 심각한 지역은 고온지대로서, 아프리카 28%, 아시아 19%, 중미 23% 감소한다. 21세기 중반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인구대국이 되는 인도는 38%나 감소한다. 호주 27%, 브라질 17%, 중국 7%, 미국 6% 순이다. 우리나라는 9% 감소한다. 특히 호주, 브라질의 감소가 현저하여 이 지역의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위험성이 높다. 농업의 기술진보가 지구온난화 영향을 완화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지만 과거의 단수추이를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

지구온난화와 농업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농업은 지구온난화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하다.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메탄과 아산화질소이다. 연료 소각, 가축의 소화기관내

발효, 가축 배설물, 시설원예, 농업기계, 수도작, 비료사용, 작물 잔해 등이 주요 배출원이다.

국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율(%), 2004년



자료 : 국제에너지기구(IEA)

예를 들면, 가축이 먹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된다. 아산화질소는 비료의 과잉시비가 원인이다. 식물성 폐기물이 야외에서 소각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나 아산화질소가 배출된다. 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하지만 온난화의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도 온실가스의 발생감축에 노력해야 한다.

순환형 사회가 온난화 방지에 공헌

향후 농업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여 농업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적응대책'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지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적응대책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작물이나 시설 등의 피해상황에 근거하여 내온성 품종개발이나 기술개발 등 안정적인 생산기술 확립이 필요하다.

방지대책으로는, 첫째 다원적 기능을 확산해야 한다. 논의 물 증발은 기온상승을 막아준다. 환경에 배려한 농지는 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 둘째, 에너지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기계 사용시간 단축이나 에너지 절약형 기계개발이 필요하다. 또 지역유통과 지산지소(地産地消)는 수송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셋째, 바이오매스로 화석연료 소비를 대체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여 지구 온난화 방지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할 때이다. **R**

9월 농정 주요 동향

2006년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 결과

통계청은 9월 11일 「2006년 농어업 법인사업체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6년 농업법인 수는 총 5,650개이며, 이 중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는 5,308개이다. 농업법인 수는 2002년 5,960개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영농조합법인 수는 2000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에 농업회사법인 수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업부문별로는 가공판매 및 기타 부문이 크게 증가하였고 농업생산과 유통판매는 일정 수준을 유지한 반면, 농업서비스와 영농대행 업체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은 기타 서비스 부문 종사 업체가 크게 증가하였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서비스 관련 법인 수가 격감(73.6%)하였다.

농업법인 중 경영경작을 하는 법인의 수는 2003년 1,399개까지 증가했다가 2006년에는 1,257개로 감소하였다. 논(22.7%), 밭(11.2%) 경작면적이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밭 중 과수 면적은 64.5%나 감소하였다. 축산의 경우 법인 수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우육, 닭은 사육 두수와 판매 두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반면 돼지 사육 두수는 200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판매 두수는 증가하였다.

법인체 수가 2000~2006년 동안 8.6% 증가한 반면 종사자 수는 34.5%나 감소하였다. 이 결과 법인당 종사자 수도 14.3명에서 8.6명으로 줄어들었다. 10인 이상 고용 법인 비중이 20.1%에서 13.8%까지 낮아진 반면, 5인 미만 고용 비중은 31.3%에서 58%까지 증가하여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다만 사업체 별 상근 고용 인원수는 증가하였고, 임시 고용 인원수는 감소하여 운영 효율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은 농업법인 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여 2006년에는 1,822개였고, 같은 기간 보조금액은 증가하여 법인당 보조금 규모는 1억 7,67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까지 증가하였다. 정부유자를 받은 법인체 수와 용자규모는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농업법인 중 상당수가 충분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2000~2006년 농업법인의 매출액 1,000원당 영업이익은 24.6원에 불과하고 2004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결산법인 중 결손법인도 626개로 26.3%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농업전문펀드 활용 등이 추진(2007. 9 기준 4개 펀드 운용)되고 있으나 법인 형태 전환에 따르는 제약, 낮은 부가가치와 리스크의 존재, 자금조달 및 순환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입법 예고

농림부는 8월 29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앞서 입법예고한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농업경영체 육성과 관련하여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등의 조항을 삭제하여 이번 안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경영체 기준 조정 및 등록제 도입, 경영규모화 촉진과 경영이양 근거 마련, 경영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개편, 농업법인제도 이관 및 지원 근거 등이 있다.

농업경영체의 범위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는 경영이양직불제 근거 마련, 기존 품목별 직불제를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로 전환 등의 정책 방향과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법인 및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기존 농업·농촌기본법에서 해당 안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9월 27일까지 공청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17일 공청회를 마친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대책(안)에서 예외를 인정하였지만 신규 진입 농가를 직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번 법안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

올 4월에 처음 도입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는 품목 등록제 또는 인증제와는 달리 자재의 효능과 성분함량은 보증하지 않고,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자재인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많은 친환경자재들이 유통되고 있으나 농가들이 이들 자재가 친환경유기농업에 적합한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미국의 비영리민간단체인 OMRI(유기농자재연구소)의 목록공세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우선 농진청 홈페이지에 1차로 공시된 17종을 게재했으며, 앞으로 공시제품수가 많아질 경우 관보개제 또는 민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도 통보하는 한편 지자체와 농협중앙회에도 통보해 구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목록공시된 제품이라는 심볼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유기농산물 품질과 안전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정리: 동향분석실>

“우수인재 육성에 초점 뒤 신입직원 교육”



신입직원들이 은성사과농장과 애플와인공장을 방문, 농촌현장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

연구원은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신입연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리엔테이션, 원장과의 대화, 현장연수, 조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신입직원들이 업무적응력과 현장감각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한 현장연수는 예산 은성사과농장과 애플와인공장, 김제 파프리카농장, 진안 온생명평생교육원을 방문, 농업경영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현장을 견학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3일간의 조사연수 체험과정을 신설해 선배 연구자들과 함께 ‘전북 진안 부귀면 4개 부락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현실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조사체험을 비롯한 이번 신입직원교육에 대해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신입직원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다양화하여 임용 1년 내 60시간 교육목표제를 적용하는 등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업체 모집

연구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는 신규입주업체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업체는 농산업 관련 분야 업체로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입주업체로 선정되면 시설지원은 물론 기술 및 경영지원도 받는다. 신규업체 모집 관련 궁금한 사항은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사무국(02-3299-4183, 홈페이지 <http://venture.krei.re.kr>)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연구원 태동 40주년 기념행사

연구원 태동 40주년을 맞아 9월 7일 연구원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967년 9월 8일 발족한 농업경영연구소가 모태가 된 연구원은 40년 동안 질과 양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특히 태동 40주년을 맞아 연구원에 재직했던 윤근환 전 농림부 장관과 이질현 전 서울대 교수, 구천서 전 단국대 교수를 초청, 설립에 얽힌 경험담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 연구진 동정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은 9월 18일 농어업특위 주최, ‘민속주 및 농민주 산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9월 6일 FTA 극복을 위한 농업인 교육을 대전시 서구 기성농협 대회의실에서 하였다.

△박성재 선임연구위원은 9월 18일 농협 중앙교육원에서 ‘상호금융의 도전과 발전방향’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은 9월 4일 영남대학교 자원문제연구소가 개최하는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선진국의 식품정책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석현덕 연구위원은 9월 16일 출국,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산림농업 국제심포지엄 참석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22일 귀국했다.

△허덕 연구위원은 9월 18일 충북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생들을 대상으로 ‘축산물 무역체계의 변화와 대응방안’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김병률 연구위원은 9월 19일 순천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다.

△송주호 연구위원은 9월 19일 당진 지역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FTA 대책 토론회에서 ‘수입 축산물의 범람시대, 국내 축산업이 살 길은?’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임송수 연구위원은 8월 30일 출국, WTO 워크숍 발표 및 협상에 참여하고 9월 13일 귀국했다.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9월 13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탐프루트 프로젝트 발진방안 세미나에서 ‘FTA 대응 주요국 과수실태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연구원 인사

△(신입) 초청연구원 이웅연(농산업경제연구센터), 천인석(농업관측정보센터), 김창호(농업구조·경영연구센터), 신유선(국제농업연구센터), 김영단(산림정책연구실)

연구원 30년사 원고 및 자료 수집

우리 연구원은 2008년 4월 1일자로 설립 30주년이 됩니다.

갖고 계신 추억의 창고를 열어 보세요.

사진과 육필원고 등 연구원 생활을 추억할 만한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면 연구원으로 보내 주세요.

유용하게 활용하고 돌려 드리겠습니다.

□ 수집자료: 육필원고, 연구원 관련 서류, 사진, 기념품, 각종 사료

□ 수집원고: 연구원 생활 추억담, 기타 30년사에 담겨야 할 원고

□ 담당: 간사 정민국(02-3299-4263), 조태희(02-3299-4226)

* 자료와 원고를 제공하는 분께는 기념품과 소정의 고료를 드리겠습니다.